

# “정쟁 멈추고 민생”...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 공감대

### “일하는 국회 복원” 한목소리...개원 두달만에 협치 실마리 시급한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야권 ‘2특검·4국조’ 변수

여야와 정부가 함께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면서 여야 갈등이 풀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정치권과 정부 간 협의의 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같은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를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화답했다.

야당의 법안 및 탄핵안 단독 강행과 여당의 재의 요구 건의라는 정쟁 반복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여 만에 처음으로 협치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이다. 여야 정책위의장도 이날 첫 회동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명칭은 다소 다르지만,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구성하는 정책 협의체를 여야가 거의 동시에 제안한 것은 이미 사전에 몰입 공감대를 형성했던 게 아니

나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2특검·4국조’는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이 대상이다.

여권은 민주당의 특검과 국조 대거 추진에 대해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속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방송 4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경우에도 정국은 급랭할 수 있다.

다만 특검·국조와 각종 미합의 법안들의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반복이 기존에 있던 ‘상수’였고, 이 같은 정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의식해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시작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책 협의기구’ 자체는 별도 트랙으로 풀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영수회담 열자”

### 박찬대·김태년 ‘비상경제협의체’ 가동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물가 상승과 주가 급락,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등 윤석열 정부에 약제가 될 수 있는 경제 이슈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비상경제점검회의’ 형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방안 협의 위해 여야 영수 회담을 개최하자”고 말했다.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야당입에도 수동적으로 여권의 정책적 대응을 지켜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초당적 협력을 이끌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후 폭염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 간 회동에

나서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행보의 이면에는 자칫 ‘국정 발목잡기’ 세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반대만 하는 ‘비토크라시’로는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장기적으로는 정권심판론에도 무게가 실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생경제 이슈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몰아붙여 온 ‘2특검·4국조’ 기조와 균형을 잡는 것도 과제가 된 상황이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조’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1순위로 올려놓은 채상병 사망 관련

특검법과 국조에 더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기점으로 방송 장악 국조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특검이든 국조든 통상 한 건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에너지가 소비됐던 전례에 비춰보면 세 건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관여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하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조를 한 건으로 합쳐서 추진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는 여전히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탓에 이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결국 이 후보가 대표에 취임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동교동 DJ 사저, 국가 문화재 지정해야”

### 지역 정치권 입장문...매각 사태·민주당 대응 등 비판

지역 정치권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 매각을 백지화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은 김 전 대통령 사저 매각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표현하며 분노했다.

광주전남김대중재단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대통령 사저를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민간인에게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김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37년간 머물렀던 동교동 사저는 군사정권 암살위협과 사형선고를 견디며 끝내 지켜낸 한국 민주주의 투쟁의 산실이자 온몸으로 싸워왔던 역사적 장소”라며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온몸을 다해 헌신한 역사적 유산을 사유화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개인에게 상업 시설용으로 팔아넘긴 행위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교동 사저 관련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와 함께했던 관련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상속세가 문제였다면 시민 모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왜 행동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재단은 민주당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재단은 “김대중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겠다는 민주당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탄생 100주년이자 서거 15주기를 맞이하는 8월18일에 전당대회를 잡고, 동교동 사저 매각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입장과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대통령 사저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대사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는 장소인 만큼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할 공간이 아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매입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조성 보존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승만·박정호·최규하 전 대통령 가옥이 이미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전례를 보아 김 전 대통령 사저가 등록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도민을 대표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선구자인 김 전 대통령 사저를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문화재로서 관리·보존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 한동훈 “영수회담 환영”

### 여당 대표 패싱 질문엔 “격식보다 민생 중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수 회담이 여당 대표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더 중시하는 실

용주의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회담을 통해 민생을 풀어나가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의 정치에서 출발하겠다”며 “그런 제안과 생각의 전환은 환영한다”며 “격식, 형식 문제는 차분히 따지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서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 특검·탄핵이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권

력을 제어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다”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 “25만원을 입법부가 법으로 제안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삼권분립이 왜 돼 있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수용하라고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등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